

## 원조공여국 회의결과

### 베트남 2004년 원조공여국 회의

#### I. 핵심 내용

##### 1. 회의 주요결과(12.1-2, 하노이)

가. 28개국 및 약 20개 국제기구에서 참석한 금번 베트남 원조공여국 회의는 향후 베트남의 경제성장 및 시장경제 달성을 위한 과제, 베트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관해 집중 토의함

- 경제성장 및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과제로서, 국영기업 및 금융부문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베트남 정부는 아직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빈곤계층의 감축을 위해 향후 5개년 경제사회 개발계획(2006-10년)작성시 빈곤감축 프로그램에 주안점을 부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베트남내 경영환경 개선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부문과 국영부문간 공정한 게임의 장(level playing field)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통합기업법 제정 및 반부패 조치 등 법제도의 정비가 조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됨

나. 베트남의 WTO 가입추진과 관련, 참석자들은 최근 EU의 대 베트남 양자협상의 완결을 평가하는 동시에, 저소득 개도국인 베트남이 과거 유사한 국가의 가입 협상시 보다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에 전반적으로 인식을 같이 함

다. 원조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방안으로서 원조의 조화(Aid Harmonization) 이슈도 금번 회의의 중요한 의제였는데, 수원국 정부의 주인의식(ownership), 해당국 경제개발계획에 일치하는 원조제공(alignment), 원조제공 절차의 단순화(streamlining) 등 3가지 주요 원칙에 대해 참석자들간

공감대가 형성됨

라. 한편, 각국 및 국제기구가 서약한 내년도 대 베트남 ODA 공여액수는 사상 최대치인 총 34억불에 이르는 바, 이는 작년 대비 약 6억불이 증가한 액수임

## 2. 관찰, 평가 및 건의

가. 베트남 원조공여국 회의는 1993년 창설된 이래 10여년간 발전해 오면서 이제는 베트남의 주요 경제, 사회 이슈들을 망라하여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장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고 평가되는 바, 베트남을 포괄적 협력 동반자로 삼고 있는 우리로서는 동 회의를 통해 베트남의 시장경제 발전 추이와 성장전략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기업진출 확대방안, ODA 공여 방향 등에 관해 구체적인 지혜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대 베트남 관계증진을 모색중인 관계부처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동 회의에 함께 참석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동 회의 직후에 베트남과 양자 ODA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요망됨

나. 베트남 정부는 향후 국영기업(SOE)의 개혁, 금융부문의 개방 및 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있어 우리의 축적된 경험을 전수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관련된 산업의 베트남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구상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경험전수에 관해서는 재정부(KDI)의 Knowledge Partnership 틀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다. 원조의 조화 문제는 최근 국제 ODA 분야에서 떠오르는 주제이고, 내년 3월 파리에서 제2차 고위급 회의가 개최될 예정인 만큼, 우리도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음

라. 한편, 베트남의 WTO 가입 추진과 관련, 현재 EU를 위시해서 싱가포르,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이 베트남과 양자협상을 타결한 상태인 바, 긴밀한 협력 파트너인 우리로서는 베트남과의 중장기적인 실질협력 확대라는 큰 틀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과감하게 양자협상을 조기에 타결짓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II. 원조공여국 회의 주요 결과

### 1. 회의 개요 및 개회식

가. 참석 현황 : 28개국 개발장관 또는 현지 대사, 20여개 국제기구 대표, NGO 대표, 베트남 정부 부총리, 기획투자부 장관, 각부처 차관 및 실무자 등 총 300여명

· 금번 회의에는 헝가리와 아일랜드가 최초로 참석

나. Vu Khoan 부총리는 개회식에서 최근 베트남 경제의 성장추세를 평가한 후, 향후 완속한 시장 경제 건설을 위해 국영기업 개혁작업 가속화, FDI 및 ODA 재원의 효율적 활용, 자본시장 발전, 과학기술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천명하고, WTO 가입 및 2006년 AFTA 이행을 앞둔 지금 산업경쟁력 제고, 경영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강조하였으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함

### 2. 2001-5년간 경제사회 개발계획 추진의 성과 및 향후 과제

#### 가. 경제적 성과 평가 및 추후 과제

##### (1) Vo Hong Phuc 기획투자부 장관의 발제 요지

- 베트남은 최근 연평균 7.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중이고, 산업구조도 2005년에는 농업 19%, 제조업 42%, 서비스 39%로 개선될 전망이다 바,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 시현
- 베트남의 WTO 가입을 위한 다자 및 양자협상도 순조롭게 진행중
- 차기 5개년 경제사회 개발계획에는 현재 별도로 수립되어 있는 CPRGS(포괄적 빈곤감축 및 성장전략)를 포함시킬 계획이며, 아울러 빈곤의 기준선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빈곤감축에 좀더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
- 2006-10년간 대 베트남 ODA 예상치는 150억불(실제 활용액은 120억불), FDI 유입액은 180억불이 될 것으로 추산되는 바, 이를 경제성장 및 빈곤감축으로 효율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관건 (현재 향후 ODA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ODA Masterplan 작성중)

## (2) 주요 토의 내용

- 대다수 참석자들은 공히 지난 5개년 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경제성장의 전망이 매우 양호하다는데 공감하였으며, 추후 베트남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국영기업(SOE)의 개혁과 금융부문의 체제정비를 지적함
  - IMF 및 세계은행은 현재 시점에서 당장 SOE 및 금융부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 동 작업의 시급성을 강조
  - 내년 중간년도 원조공여국 회의(6월, Can Tho시 개최 예정)에서 동 추진경과를 점검하기로 합의
- EU는 차기 5개년 계획서에 빈곤감축, 경영환경 개선(level playing field 조성), 반부패, 법치 및 인권개선(언론자유 포함), 환경보호 등 5개 핵심이슈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이에 대해 다수의 국가들이 공감을 표시함
- 여러 참석자들은 성장의 규모와 함께 “성장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긴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빈부격차 해소,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 산업경쟁력 제고 등에 좀더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 등은 중부 고원지대 거주 소수민족의 빈곤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고 언급하고, 자국 ODA의 절반 정도를 동 문제해소에 활용할 계획임을 발표함
- 우리나라는 베트남 정부의 개발 노력을 평가한 후, market forces의 강화, 경쟁력 제고, 고용창출이 베트남 경제의 향후 주요 과제라고 지적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증진, FDI 유치 확대, 금융체제 발전, SOE의 개혁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 (3) 베트남 정부의 주요 반응

- Vu Khoan 부총리는 우선 SOE 개혁과 관련, SOE가 그동안 경제성장에 이바지한 점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중요한 것은 국영/민영의 구분이 아니라 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며, 현재 베트남 정부는 개혁의 질에 초점을 두고 강력한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말함
  - 아울러 조세제도 개선, 금융시장 육성, 부실채권 정리, 금융시장 개방 등 금융부문 개혁작업은 2010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
- 아울러 Khoan 부총리는 소수민족 및 산악지역 빈곤감축을 위해 “135 program”이라는 정책이 시행중임을 언급한 후, 언론자유와 관련해서는 현재 베트남 내에 500여개의 신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자유의 문제는 각국 상황에 맞는 수준이 따로 있다는 점을 강조함

#### (4) 참고사항 : IMF 대표가 발표한 최근 베트남 경제 현황 및 전망

- 전반적으로 양호한 경제성과를 보이는 가운데 금년 성장률은 약 7.5%, 인플레이는 약 9.5%, 경상적자는 GDP의 4.5%, 외환보유고(2003년말)는 56억불 기록 전망
  - 그러나 경제내 유동성 증가와 더불어 인플레이 압력은 상존하는 바, 정부의 물가억제 및 재정긴축 등의 조치는 계속 필요
- 대형 국영은행의 주식화 등 SOE 개혁조치는 아직 추진속도가 느린 상황
- 2005년에도 베트남 경제의 성장세는 올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일 것이며, 인플레이는 5-6% 수준에서 억제될 전망
  - 단, WTO 회원국에 대한 섬유 쿼터 폐지에 따라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임으로써 수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
- 중장기적인 지속성장 및 빈곤감축에 있어 경제구조 개혁이 관건인 바, SOE 개혁, 민간부문 육성, WTO 가입, 가버넌스 및 정책투명성 제고 등이 주요 과제

#### 나. 빈곤감축 및 사회부문 발전 성과와 과제

##### (1) 기획투자부 전문가의 발제 요지

- 2001-5년간의 주요 사회적 성과와 문제점
  - 2005년까지 750만개 고용창출, 7% 이하의 빈곤가계 비율, 청정수 공급률 62% 등 달성 전망
  - 낮은 노동의 질과 생산성, 빈곤감축의 추세 불안정, 보건상태의 취약, 사회부문에 대한 투자 미흡 등 문제점 상존
- 2006-2010년간 사회부문 목표와 과제
  - 8백만개 일자리 창출, 빈곤가구 25% 감축, 청정수 공급률 90%, 18백만 국민에 사회보험 제공 등 추진
  - 이를 위해 사회부문 투자 확대, 교육 및 보건의 질 개선, 사회인프라 구축 등 추진
  - 아울러 차기 5개년 사회경제 개발계획은 CPRGS를 융합하여 입안할 계획
- HIV/AIDS 통제 및 예방 조치 중점 추진
  - 2003년말 기준 HIV 감염자 수는 약 215천명
  - 현재 매년 2-3만명의 감염자가 발생하는 추세인데, 신규 감염자의 60%가 20-29세 연령
  - 2010년 이후에는 더 이상 신규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하에, 감시, 교육, 감염자 보호, 치료제 보급, 수혈 안전조치 시행, 국제협력 등 적극 전개 예정

## (2) 주요 토의 내용

- 빈곤감축과 관련, 산간지역 주민 및 소수민족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요구하는 의견이 다수 개진되었으며, 농촌개발, 직업훈련, 보건 및 교육투자의 중요성도 지적됨
- 12.1 유엔이 지정한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다수의 참석자들은 에이즈 퇴치문제가 심각한 개발 이슈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베트남의 정책을 평가한 후, 원조공여국간 공조를 통해 효율적인 에이즈 퇴치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합의함
- 한편, WHO 대표는 보건과 교육에 대한 투자 없이 경제발전에 성공한 역사적 사례는 없었다고 지적한 후, 현재 에이즈 보다 훨씬 심각한 범지구적 전염병(pandemic)의 징후가 조만간 실제상황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는 지금(그리고 그 진원지는 태국,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추측되는 지금) 이에 대비한 보건투자 및 경각심이 매우 긴급하다고 경고함

## 다. 차기 5개년 사회경제 개발계획의 주요 방향

- 베트남측의 차기 5개년 계획 입안방향에 대한 설명에 대해 캐나다, 영국, 덴마크, EU, 핀란드, 독일, 일본 등은 공동작성한 paper를 통해 동 계획안이 i) 성과지향적인 것이어야 하고, ii) 포괄적인 빈곤감축 방안을 포함해야 하며, iii) 일반국민의 폭넓은 참여를 허용하고, iv) 계획과 예산이 긴밀히 연결되도록 해야 하며, v) 민간부문의 역할을 최대한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등 5개 희망 원칙을 발표함

## 3. 베트남의 WTO 가입 및 도전

### 가. 베트남 Vinh 무역차관의 최근 경과 설명 요지

#### (1) WTO 가입협상 현황

- 그동안 8차례 가입작업반 회의를 거치면서 베트남은 WTO 협정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및 입법일정안을 제출한 바, 회원국들은 지난 6월 8차 작업반 회의시 차기 회의부터 작업반 보고서 초안을 토의하기로 합의
- 지난 4월 제출한 최근 양허안은 평균 18%의 상품관세, 10개 부문(92개 sub-sector)의 서비스 시장 개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바, 현재 EU, 싱가포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과 양자협상을 완료했고, 약 15개 국가와의 협상이 진행중

## (2) 현재 직면한 과제와 난관

- 법제도 완비를 위한 지식 및 경험의 부족, 숙련 인력의 부족 등이 큰 문제
- 국내산업의 낮은 국제경쟁력, 국제분쟁의 경험부족 등으로 인해 WTO 가입 이후 상당한 시련에 처할 위험성 다대
- 개방에 따라 국내 노동, 자원의 비교우위가 감소하게 되면 해외투자 유입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 지게 되므로, FDI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유인책 마련 필요성 점증

## (3) WTO 가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 비교우위 산업을 중심으로 베트남의 산업구조를 개선
- 수출증진 정책을 강력히 전개하면서, 무역정책 수립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도 마련
- 국내 법제도를 완비함과 동시에 WTO에 관한 대국민 홍보 노력 전개

## 나. 주요 토의 내용

- 우선 EU는 지난 10월 대 베트남 양자협상이 조기 타결된 데에는 주요 교역상대국으로서 EU가 베트남의 우선순위 정책목표 달성에 협조한다는 의지가 있었고, 유럽 투자자들의 베트남 진출 욕구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배경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협상의 결과는 매우 “balanced”된(EU측이 요구사항을 대폭 낮춘) 것이었다고 강조한 후, EU로서는 베트남의 SOE 개혁작업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 이어 EU는 협상타결에 따라 베트남의 섬유산업에 대한 대 EU 수출 쿼터는 철폐될 것이라고 참언(베트남은 내년 MFA 소멸 혜택을 못 받는 국가 중 하나지만, EU는 대 베트남 섬유쿼터를 폐지 예정)
- Oxfam(NGO) 대표는 베트남의 WTO 조기가입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에 따른 위험과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준비와 교육, 사회안전망 정비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 후, 협상국들로서는 베트남을 같은 경제수준의 국가들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고, 베트남에 대해 과도하거나 추가적인 요구(extortion at the gate)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함
- 영국, 세계은행, 호주 등은 베트남의 WTO 조기가입을 지지한다고 말하고, WTO 가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문제에 관해 협력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언급함
  - 현재 세계은행은 베트남의 WTO 가입영향 분석 보고서 작성 작업 진행
- 우리는 베트남의 WTO 가입이 다자 무역질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조기가입을 적극 지원한다고 말하고, 가능한 조기에 양자협상을 타결짓도록 추진중이라고 언급함



## 4. 베트남의 국제경쟁력 강화

### 가. 베트남 경영환경 개선

(1) Vietnam Business Forum 대표(IFC 대표)의 최근 회의결과(11.29) 발제 요지 (VBF는 베트남내 경영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정부 및 업계가 공동참여하는 회의로서 원조공여국 회의 직전에 개최되며, 공동의장은 기획투자부 장관 및 국제금융공사(IFC) 현지 대표가 맡고 있음)

- 설문조사 결과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투자대상국이라는 것이 중론이며, 베트남의 비교 우위는 지리적 위치, 확대되는 시장, 정치적 안정성 등
- 현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요구되는 사항은 행정절차의 간소화, 부패척결, 현대적 경영기술 도입, 인프라의 질 향상, 자본시장의 육성, 공정한 게임의 룰(level playing field) 정립 등
-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베트남의 최근 베른협약 가입을 환영하나, 강력한 법집행 미흡, 관대한 처벌 관행, 부처간 공조미흡 등은 아직도 개선의 여지 다대
- 자본시장 육성과 관련, 정부는 i) 기업들이 주식을 증시에 상장하도록 권고 내지 강제할 필요가 있으며, ii) 국제투자자들이 주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대규모 SOE를 투명성 있게 주식화(equitize)해 나가는 것이 필요
- SOE, 민간기업, 외투기업간 공정한 게임의 룰 정립과 관련, 통합기업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동 법이 모든 SOE를 예외 없이 규율할 수 있기를 기대

### (2) 주요 토의 내용

- 다수의 참석자들이 베트남의 경영관련 법제도의 조속한 정비를 촉구함
- 호주는 베트남이 WTO 가입 이후 MFN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할 것을 촉구 하였으며(이에 대해 베측은 별도의 답변을 안함), 미국은 인권 및 종교의 자유 개선이 FDI 유입과도 연결된다는 점을 지적함
- Phuc 투자기획부 장관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한 후, 동 일환으로 최근 기획투자부 내에 기업들의 소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별도의 조직 (“MPI i”, 감사처)을 신설했다고 소개함

### 나. 반부패

- 베트남 감사원 대표는 현재 베트남의 부패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절차의 투명성 증진,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 방법 효율화, 일반시민의 반부패 인식 제고 등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언급한 후, 현재 아래와 같은 법제를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소개함.



- 반부패법, 공무원 탄핵법, 공직자 재산 공개법, 공직자 행동 규범 등
- 덴마크 등 수개 유럽국들은 베트남내 부패가 너무도 심한 수준이라고 성토했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으며, 일본은 반부패 법제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행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함.
- 스웨덴은 베트남내 부패의 현황과 대응처방을 담은 보고서 작성 작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다고 소개함
- 태국은 공공부분의 부패 문제와 함께 민간부분의 수뢰 문제도 동시에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5. ODA의 효율성 제고 : 원조의 조화

### 가. 원조효율성 파트너십 그룹의 최근 보고서 발제 요지

- ※ 파트너십 그룹은 원조공여국과 주재국 정부간 소규모 협의체인데, 각 주제별로 현재 24개 그룹이 형성되어 있으며, 원조효율성 그룹은 MPI 국장 및 일본 대사관 측이 공동의장
- 원조조화의 3개의 축인 ownership, alignment, streamlining 모든 면에서 베트남 정부 및 공여국의 정책에 큰 진전 시현
- Ownership 측면에서 베트남 정부는 파트너십 그룹 형성 등을 통해 공여국과의 효율적인 공조 메커니즘을 구축했고, ODA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중이며, 행정조직도 개선했는 바, 앞으로 법제 완비 등 지속적인 노력 필요
- ※ ODA 법제는 “Decree 17”(2001.5 제정)로 대표되는데, 다른 투자 및 건설 관련 법률과의 상충 문제, ODA 재원의 다기화에 따른 규율 대상의 확대 문제 등이 대두되어 현재 개정 작업 진행중
- Alignment 측면에서도 개발계획 수립시 공여국과의 협의 메커니즘(원조공여국 회의 등)이 구축되어 있고, 상호협의를 거쳐 “ODA Master Plan”이 작성되는 등 양호한 상태
- Streamlining과 관련, 최근 다수의 공여국들간 공동 사업 추진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원조공여 절차도 단순화되는 추세이나, 아직 충분한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

### 나. 주요 토의 내용

- 다수의 참석자들은 베트남의 ODA 수원 정책과 프레임워크가 전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치하하면서, “Decree 17”의 개정, “ODA Master Plan”의 작성을 환영함
- 아울러, 내년 3월 파리에서 개최되는 2차 원조조화 고위급 포럼에 베트남의 모범사례가 충분히 소개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동의
- 한편 수개국은 지방 및 소외계층에서도 ODA의 혜택을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마

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공여국 차원에서는 원조제공 방식을 간소화하는 streamlining에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 Phuc 장관은 완전히 투명한 ODA 절차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하고, 공여국의 원조절차 단순화 문제에 대해서는 각국의 고유한 관행과 절차가 있는 만큼 베트남으로서는 이를 최대한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함

## 6. 각국 및 국제기구의 2005년 대 베트남 원조 서약

- 총계 : 34억불
  - 작년 서약액(28억불) 대비 6억불 증가
  - 동 증가액중 1.7억불은 달러화의 평가절하에 기인하며, 1억불은 금번 처음으로 합산되는 NGO의 서약액
- 주요국 서약액
  - EU : 총 722.5 백만 유로(작년 대비 37% 증가)
  - EU 회원국 중 프랑스 334.4 백만 유로(작년 서약액의 3배), 영국 80.5 백만 유로, 덴마크 51.6 백만 유로, 독일 48 백만 유로, 이태리 40.3 백만 유로, 스웨덴 36.9 백만 유로, 화란 29.5 백만 유로, 스페인 27.9 백만 유로, 벨기에 28.5 백만 유로, EC 24 백만 유로, 핀란드 10 백만 유로 순
  - 일본 : 총 9억불(유상 8억불, 무상 1억불)
- 우리는 지난 13년간 베트남의 인프라 확충 및 인적자원 개발에 초점을 두어 총 228 백만불의 ODA를 제공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의 원조를 지속할 것으로서, 내년의 경우에는 총 24백만불 상당의 유무상 ODA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소개함
- K. Rohland 금번 회의 공동의장(당지 세계은행 사무소장)은 내년 원조서약액의 큰 폭 증가는 유로화 및 엔화의 가치상승에 기인한 점도 있지만, 베트남에 대한 협력의 의지가 점증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라고 강조함

## 7. 폐회 세션

- Phuc 장관은 금번 회의가 향후 베트남의 시장경제 발전 및 경제발전에 매우 유익한 관점을 다수 제기해 주었다고 평가한 후, 앞으로 경제개발계획 작성 과정에서 성장의 질 개선(경쟁력 및 생산

성 강화), 제반 개혁 추진(SOE, 금융부문 개혁, 민간부문 육성), 사회이슈 개선(교육, 보건, HIV 퇴치, 벽지 및 소수민족 빈곤감축) 등 3가지 이슈를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말하고, 베트남의 WTO 가입과정 및 그 이후의 적응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함

- 아울러 내년 중간연도 원조공여국 회의(6월, 잠정적으로 메콩강 유역에 위치한 Can Tho시에  
서 개최 예정)에서 금번에 논의된 주요 사항들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Khoan 부총리는 원조서약액이 커서가 아니라 실질 논의의 내용 면에서 금번 회의의 성과가 기대 이상이었다고 말하고, 현재 개원중인 국회에서 금일(12.2) 베트남 사상 처음으로 총리가 직접 대정부 질의응답 세션에 나섰는데, 거기에서도 토의내용은 성장, 사회이슈, 반부패, 행정개혁 등 금번 회의 의제와 동일한 것이었다고 소개한 후, 베트남의 경제사회 개발, WTO 가입, HIV 퇴치 등 제반 이슈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역설함

[자료 : 주베트남 대사관]

## 중국 제5회 공여국 회의

---

### 1. 회의개요

가. 회의일시 : 2004.12.7(화) 09:00~17:00

나. 회의장소 : 북경 중원호텔

다. 개최배경 : 상해 세계 부빈감소 확산 회의 후속

라. 주최부서 : 중국 상무부/국민판

마. 회의주제 : 1) 빈곤완화 2) 서부 지역개발 3) 동북공업지역재개발

### 2. 핵심내용

- 상해 “빈곤완화 확산 국제회의”의 후속 실무회의로 “제5회 개발협력에 관한 원조공여국 조정회의”가 세계은행, UN 등 국제기구와 영국(DFID), 일본(JICA)등 양자협력기구 및 중국의 주요부처, 각 성, 시의 국장급 등이 참석함
- 최근 중국 경제가 급성장함에 따라 중국의 ODA 수혜국 졸업 여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제기가 있는 가운데 개최된 동 회의는 중국 서부지역의 전통적인 농촌 빈곤문제 외에 동북지역의 도시 빈곤문제와 아울러 AIDS, 교육 등 비소득 부문에 대한 새로운 개발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알리고, UN이 정한 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원조의 필요성을 논의,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3. 주요 발표내용

가. 상무부 대표(易小准 상무부 부장조리)는 2003년 1인당 평균 소득 1,000달러에 달하였으나, 중국은 여전히 중저소득국로서 현재 절대빈곤 인구가 2,900만명에 달하고 있고, 경제 구조의 변화로 인한 지역격차와 빈곤문제, 에이즈 등을 민감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중국 빈곤 현황의 심각성을 설명함. 아울러 환경보호와 질병예방 및 사회복지 제고 등 각 방면에 걸쳐 중국 정부는 선진 원조공여국과의 국제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함

나. 국무원 부빈 대표(王·良 부주임)는 중국정부는 지난 80년대에 빈곤감소 사업을 개시한 이래, 90년대에는 서부지역 개발사업을, 2004년에는 동북공업지역의 경제재개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지난 20여년의 扶貧 사업을 통해 2억명의 빈곤문제를 해결하였다고 밝힘. 그러나 중국은 아직도 14만8천개 진현 단위의 생활, 생산조건이 불안정하며, 최근에는 빈곤회귀 현상(2003년에 1,460만명의 빈곤 해결이후 자연재해등 문제로 1,540만명이 다시 빈곤상태 회귀)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중국 빈곤 문제는 이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으며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함

다. 이어 국무원 부빈사무실 吳忠처장은 상해 회의의 후속조치를 보고하면서, 중국정부도 2004년 5월 상해 회의이후 중국 國際扶貧中心을 설립하는 등 빈곤문제해결에 노력하고 있음을 말하고, 중국은 현재 세계적으로 빈곤규모가 가장 큰 나라로서 빈곤층이 자연지리적 원인으로 인해 분산 거주해 있고, 유동인구의 증가로 인해 빈곤평가에 어려움이 있는 등 중국 빈곤상황의 특성을 설명하고, 최근 중국의 빈곤감소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고 설명함('90년대 이전 매년 1,370만명 감소, 2003년에는 80만명 감소). 아울러 현재 중국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금의 원조보다 빈곤측량기준과 정책경험 및 기술의 학습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중국국제빈곤센터의 설립취지라고 밝힘

라. 세계은행 대표(Dr. David Dollar)는 국제 빈곤기준(U\$1/day) 적용시 중국 빈곤문제는 심각하다며(6,000만명의 빈곤인구), 현재 중국이 보다 긴요한 것은 공여국으로부터의 원조금이라기 보다 중국 정부의 빈곤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계획과 정책수립이라고 언급하고, 중국 빈곤 감소사업에 있어서 NGO의 성과를 높이 평가함

마. 이밖에 UN대표(UNIDO소속)는 중국은 빈곤규모가 세계 1위라고 언급한 뒤, 향후 도시와 농촌, 지역간, 사람과 자연, 국내발전과 대외개방간의 조화발전이 중국이 맞게 될 새로운 도전이라고 언급하고, 중국 사회가 현재 안고 있는 성적 차별, 지역 격차 외에도 MDGs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국 빈곤문제의 해결이 긴요하며, 국제사회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아울러 EU대표는 근래 중국이 질병, 교육 등 분야에 있어 큰 변화를 겪고 있는 등 중국 빈곤문제의 변화에 비추어 지속적인 국제원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3년전에 7명에 불과했던 주중 EU대표부 인력이 현재 50명으로 급증하였음을 예시하며 EU와 중국간의 지속적인 협력확대를 언급함

- 또한, 양자원조기관의 대표로서 발언한 호주(AusAID)는 '99년부터 개시한 중국과의 협력사업을 소개하고, 위생,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확대 필요성을 언급함

바. 국가 서부개척사무실 대표(童章舜 처장)는 중국은 국가경제 투입의 1/3을 서부개발에 할애하고 있으며, 서부개발의 주요사항으로 농업발전과 인력자원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힘. 지난 5년간 750억위엔(미화 91.4억불)의 투입으로 생태환경 개선에 노력해 왔으며, 생태환경 연구분야에 있어서 양자간 협력의 필요성과 ODA 졸업이 원조의 종단을 의미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함

사. 국가 동북지역 진흥사무실 대표(陳建宗 처장)는 동북 3성지역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원재료 공급처로서 많은 기여를 했으나(원유생산 전국의 2/5, 목재공급 전국의 1/2), 동북 36개 공업도시 중 20개 도시가 자원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자연환경이 상당히 악화되었다고 언급하고, 최근의 경제 구조개혁으로 인하여 도시 실업(전국 도시 빈곤 인구의 1/4인 약500만명의 도시 빈곤층 발생)과 슬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진국의 지속적 지원을 요청함

아. 상무부 대표(柴小林 부사장)는 중국은 그간 희망공정(250만명의 아동에 대한 학습기회 제공)과 세계은행과의 소액융자(Microfinancing)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80년대 3억명이던 빈곤인구가 현재 2,900만명으로 감소되어 매년 약 1천만명의 빈곤인구가 감소해왔다고 밝히고, 현재의 빈곤문제는 도시빈곤과 실업, 빈부격차 등 새로운 형태의 도전을 맞고 있다고 밝힘

자. 아울러 회의 당일 오후에 진행된 참석자간 토론에는 국제협력사업 추진시 NGO간의 활동도 유익하나 중국 정부를 통한 활동이 원조 효과면에서 우월하고, 동북지방은 빈곤문제에 있어 유동인구가 많아 인구통계, 관리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점이 언급됨

#### 4. 관찰 및 평가

- 금번 회의는 지난 11.28일 라오스 ASEAN 정상회담시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대 중국 원조 중지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는 후에 개최된 까닭에 중국정부는 대 중국 원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로 활용하였음. 특히, 세계은행은 대 중국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EU 등 여타 참석 대표들도 이에 공감을 표시함
- 향후 중국은 선진 원조국과의 경비분담(cost-sharing) 형태의 협력사업을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자체적으로 설정한 절대빈곤 기준을 국제기준으로 점차 변경할 것으로 보임. (1인당 GDP 625위엔<약 U\$76> → 365U\$, 혹은 0.2U\$/day → 1\$/day)

## 인도네시아 제14차 원조공여국 회의

### 1. 제 14차 인도네시아 원조공여국 회의

(The 14th Meeting of the Consultative Group on Indonesia)가 2005.1.19~20간 20여개 공여국, W/B 및 ADB 등 10여개 국제기구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니정부 주관으로 인니 중앙은행에서 개최됨.(1.19 인니 대통령궁에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니 대통령 참석하에 표제회의 개막식 개최)

#### 가. 회의참석

- 우리정부는 주인도네시아대사를 수석 대표로 박강호 국제경제국 심의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차영철 참사관, 백두옥 산자관, 김일평 건교관, 박종호 임무관, 한충식 KOICA 소장, 강연화 KOICA 기획조정팀 과장이 참석
- 인도네시아측에서는 인니 대통령, 경제조정장관, 국가개발계획청장, 보건장관, 환경장관, 법무인권장관, 국방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대법원 행정실장 등 참석

#### 나. 금년도 CGI회의 특징

- 지난 제13차 회의까지 일본, 미국, EU 등 주요 공여국 및 세계은행 (W/B) 등이 주도적으로 동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금번 회의시 최초로 인니정부 주관으로 회의가 진행됨.(경제조정장관이 의장)

#### 다. 인니 대통령 개막 연설 요지

- 인니 지진·해일 피해 관련 각국의 긴급 지원에 감사드리며, 아체 재건·복구에도 국제사회의 계속적인 지원을 기대함.
- 번영, 복리, 공평, 민주사회 건설에 대한 의지가 확고함
- 지진 피해 관련 아세안정상회의(1.6, 자카르타)에서 합의된 지역조기 경보체제가 조기 구축되길 기대하며, 공여국들의 협조를 기대함
- 인니 신정부 출범(04.10.20) 이후 경제가 다소 회복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환경 개선, 법적 안정성 확보, 규제철폐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 CGI 회의가 수년간 인니 개발에 기여한 역할을 평가하며, 향후에 인니정부와 동등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한 협조를 기대함.
- CGI 멤버들이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인니의 국가개발계획과 부합되기를 기대함
- CGI 멤버들의 건설적인 제안을 인니정부의 개발전략 수립에 반영하겠음



## 2. 표제회의 주요 결과

가. 아체 지진 및 해일 피해 관련 인니정부의 피해 및 손실액(약 45억불)과 재건 및 복구관련 잠정 계획 발표

나. 공여국 및 주요 국제기구들이 2005년도 대인니 원조자금으로 유·무상 총 34억불 제공을 공약함(별도로 Aceh 지진·해일 피해관련 12억불의 무상원조와 5억불의 유상원조를 공약함).

- 각국의 공약내용

- 박강호 심의관은 금년도 우리정부의 대인니 유상원조(EDCF 자금 760만불) 및 KOICA 무상원조 420만불의 지원 예정을 밝힘.

- 별도로 Aceh 피해관련 인도네시아에 대해 2005~2007년간 총 1,500백만불 지원 예정을 밝히고, 국내 민간단체 성금 500만불 전달 사실을 언급함

다. 인니 중기개발계획 및 빈곤퇴치, 분권, 교육/보건, 삼림/환경, 사법개혁, 반부패 등 각 분과별 진전사항 협의(5항 참조)

## 3. 평가 및 건의 사항

가. 금년 회의는 아체 지진 피해 이후 개최되어 회의의 관심이 기존 의제보다는 피해복구 계획 협의에 집중되었으며, 동시에 과거의 회의운영 방식을 탈피, 인니정부의 주관하에 회의가 진행됨에 따라 세계은행, ADB, 주요공여국 (일본, 미국, 호주, EU 등)의 역할이 축소됨

- 인니 경제조정 장관은 향후 정기적으로 공여국들과 협의회를 가질 예정임을 언급

- 금년도 CGI 중간평가 회의는 6월경으로 예정됨.(아체 재건 및 인니 전반적 개발 문제, 2006년도 인니 정부 예산안 등 협의)

나. 당초 인니정부는 금년도 CGI에서 공여국들의 지원액을 28억불 정도로 예상하였으나, 총 지원액이 34억불로 인니 신정부에 대한 공여국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반영됨

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기간산업 구축을 위해 투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제반문제(안전문제, 법적 불확실성, 다양한 규제, 중앙 - 지방정부간 규정, 감독, 권한의 이중성, 사회전반에 만연한 부패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 해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인니 법무장관, 국방장관, 검찰총장, 대법원 간부 등 안전, 사법관련 고위인사가 CGI 회의에 대거 참석, 중앙정부의 정치적 의지를 과

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참여 멤버들은 긍정적 평가를 하는 한편, 공여국들은 이러한 인니 정부의 의지가 구체적으로 실천되기를 주문함

- 라. 아체 지진·해일 피해 재건·복구 관련 우리 정부의 대 인니 지원 공약금(향후 3년간 15백만불)의 집행 관련, 향후 인니 정부와 공여국간 정례적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동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당지 KOICA 사무소의 업무지원 강화를 건의함
- 또한 우리 정부의 지원금으로 사용할 구체적인 희망 프로젝트는 당지 방문한 정부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니 정부와 협의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 4. 아체 지진 및 해일피해 관련 인니정부(Ms. Sri Mulyani 국가개발계획청장)의 피해 및 손실액 평가와 함께 재건 및 복구 잠정 계획의 발표

##### 가. 배경

- 파리클럽에 의한 인니의 대외 채무 모라토리움 결정(1.12) 이행을 위해 아체 지진 및 해일 피해 규모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구체적 재건·복구 계획 마련이 필요
  - 인니정부는 W/B, IMF와 협조, 금번 CGI 회의에 잠정 피해액 평가 및 재건·복구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 최종 피해 평가 및 재건·복구 계획 완성에는 아직도 수개월이 더 소요될 전망

##### 나. 아체 및 북부 수마트라 지진·피해 관련 피해 및 손실액 산정 발표(1.18 현재)

###### (1) 인적피해

- 사망 : 90,000명
- 실종 : 132,000명
- 실향민(homeless) : 394,000명
- 실종자중 상당수가 사망하였을 경우 및 아직도 아체 서해안쪽 일부지역의 피해상황 미파악 등 고려시 실제 사망자수가 160,000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발표도 있음.(1.20 인니 보건장관 발표)

###### (2) 물적피해

- 피해 및 손실액 총계 : 약 45억 달러(인니 GDP의 2.3%)
  - 사회분야 : 1,741억 달러
  - 기간산업분야 : 0.877억 달러

- 생산분야 : 1,182억 달러
- 기타 : 0.652억 달러

## 다. 인니정부의 긴급구호, 복구(rehabilitation) 및 재건(reconstruction) 계획

### (1) 추진시기

- 1단계 긴급구호 : 0-6개월
- 긴급식량, 의약품 지원, 임시기간산업, 임시거처 설립, 사망자처리 등
- 2단계 복구 : 0.5-2년
  - 공공서비스, 법/질서, 기본적 경제기반, 임시숙소, 정신적 피해 치료 등
- 3단계 재건 : -5년
  - 경제재건, 교통·통신 등 인프라구축, 사회제도구축, 주택건설 등

### (2) 추진방향

- 피해, 손실액 평가 → 피해지역의 복구·재건에 대한 필요한 내용 파악 → 복구·재건 전략 수립
- 재원동원, 신탁전략 마련

## 라. 재건 및 복구 계획 수립 및 추진시 인니정부의 기본방향

### (1) 아체주민의 희망사항 반영

- 1.19 CGI 회의에 아체 주민대표가 참석, 모든 재건·복구 계획은 아체 주민의 희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발표

### (2) 아체지역의 특성(인니로부터 분리독립을 추구해온 정치적 분쟁지역)을 고려, 금번 재건·복구 과정을 아체지역 국민과의 화해(reconciliation), 통합의 기회로 활용

### (3) 재원 사용의 투명성, 효율성 확보

### (4) 공여국가, NGO 등과 조정 메카니즘 구축, 협의

### (5) 피해지역 복구·재건·개발 계획의 청사진은 인니정부가 작성(각공여국이 특정지역에 학교 건설 등 특별 희망사업이 있을 경우, 조정메카니즘을 통해 인니정부와 사전 협의)

## 마. 공여국의 재건·복구 지원금 운영 방법(지진·해일 피해 관련 기서약한 금액의 이행시)

(1) 인니정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각국에 회람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양자 직접지원, UN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프로그램에의 지원 (Co-financing multi-lateral programs), 다수 공여국간 합동 프로젝트 마련 (Pooling donor resources)을 통한 지원방식을 제시함.

- 상기 양자 직접지원시, 인니정부는 외국정부의 지원을 인니정부 예산에 포함(budgetary process), 인니 정부가 공여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직접 사용하기를 희망

### (2) 인니정부-공여국간 지원금 사용 조정관련 협의 메카니즘

- 인니정부는 향후 인니정부-공여국간 정기적인 협의회를 매달 개최할 예정이며, 모든 지원금 관련 조정문제를 동 협의 메카니즘을 통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며, 동 메카니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조만간 각국에 통보 예정

- 동 협의회는 기존 CGI 멤버 이외에 중국 등과 같이 지진·해일 피해에 대해 지원 의사를 밝힌 국가들도 포함되는 CGI+ 형식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미정

- ※ 참고사항 : 일본의 경우, 쓰나미 피해 지원 관련 총 5억불중에서 2억 5천만불은 UN에 의해 집행, 양자간 지원(2억5천만불)중 절반인 약 1.46억불을 인도네시아에 집행 예정이며, 동 집행방법은 인니-일본 양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 함.

- 인니정부는 의회와 협의, 조만간 인니 국내인사들중에서 금번 지진 피해 조정 역할을 담당할 특별 인사를 선정 예정

### (3) 각국 지원금의 성격

- 인니정부는 무상원조의 지원금을 선호하며, 신규 유상원조(concessional loan)를 통한 피해 복구 및 재건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추진할 예정
- 유상원조금이 아체 피해지역 프로젝트에 사용시는 기존의 통상 절차보다 신속한 지원을 요청

## 바. CGI 멤버들과의 토의 요지

(1) 24개 임시숙소 설치 및 주민(인니정부는 주택을 상실한 주민들을 난민 또는 IDPs로 호칭하는 것에 대해 이견)들의 집단 이주 문제

- 인니정부는 주택을 잃은 주민(homeless)들을 대상으로 24개 지역에 대규모 임시숙소를 건설, 주민들을 집단 이주 예정
- 일부 멤버들은 주민들중 친척이 있거나, 같은 마을사람들 집에서 함께 기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여타지역에 위치한 임시숙소로 이주하지 않을 것을 제의
- 이에 대해 인니정부는 기본적으로 어느 곳에도 기거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주 예정임을 언급

## (2) 민간단체, private sector에 의한 지원금 사용에 대해 투명성 확보 문제

- 각국의 민간단체, NGO 등이 모금, 송금해온 지원금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을 제기
- 이에 대해 인니정부는 모든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지원금을 인니정부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전제하에 각국 정부가 자국 민간단체들의 지원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인니정부에 제공해 줄 것을 요청

## (3) 지방정부 구축 문제

- 현재 아체 지방공무원, 서류, 건물 등 모든 시설이 파괴되어 당분간은 연방정부가 직접 아체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나, 동 지방정부의 재건·운영문제는 인니 중앙정부의 우선 관심사항임.

※ 2005.6월 예정인 인니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시 아체지역 선거는 연기된다고 발표

# 5. 중기 개발 계획(2004-2009)

## 가. 인니 정부(국가 개발계획청장 발표)

- 향후 5년간 인니 신정부가 개발관련 추진할 5개년 계획의 대강을 발표
  - 안전, 공정·민주 사회 및 번영된 복지사회 구축 목표
- 과거 5개년 계획에 비해 정책 및 제도 개혁에 초점
- 정치·사회 개발과 경제분야 개발의 균형 유지
  - 98년 정치·경제 위기의 경험 고려
- 정치·사회 개혁 강화를 위해 민간 분야의 점증하는 요구사항 반영
  - civil society 강화, 제도 강화, 인권 강화, 민관 파트너십 강화
- 지역별, 분야별 갈등 해소 노력
  - 지방자치 단체의 인식제고, 인권보호 및 소수 그룹 보호, 법률 개혁, 공공서비스 개선
  -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성 강화
  - 중앙정부와 지방간 역할 및 의무 분담의 명확화
- 청년 및 취업 그룹에 대한 보호 강화
- 매년 6-7%의 경제 성장을 통해 빈곤퇴치 및 고용창출
  - 기간산업 개발 강화

## 나. 토의요지

- 인니 중기개발 계획 목표가 UN 밀레니움 개발 계획 목표(MDGs)와 부합됨을 평가하고, 향후 동 목표의 실제 이행 실적을 요청

- 중기개발 계획의 이행과정에 대한 평가 및 감독 체제의 구축 필요성 제기

## 6. 분과별 토의 내용

### 가. 지방분권화(Decentralization)

#### (1) 인니 정부

- 새로운 지방분권화 법률(지방 통치에 관한 제32법/2004, 중앙 및 지방정부간의 회계계정 제33법/2004) 제정
  - 지방정부 및 중앙 정부기능에 관한 규범, 제33법률에 관련 세부 7개 정부규범 제정 추진중
-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등 지방정부의 개발장애요인 제거를 위해 노력하고, 세원 등에 관하여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강화

#### (2) 토의요지

- 지방 분권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가 중요함을 지적하고, 지방정부의 행정 능력 강화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
- 지방정부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에 대한 외국인 기업과 잠재적인 투자가를 포함한 공여국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효율적인 감독방안 필요성 제기
- 그 외 지방정부간의 재정자립도 차이, 지방정부의 낮은 재정자립도, 공여국의 지방분권에 관련된 대인니 정부의 창구와 mechanism 등을 논의

### 나. 빈곤감소(Poverty reduction)

#### (1) 인니 정부

- 연간예산에서 빈곤감축을 위한 중기전략 실행
  - 도시빈곤문제 해결, 예산확보, 도서지방 권한 부여, 농업활성화 등
- 빈곤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노력을 강조
- 빈곤층을 위한 지원, 빈곤 모니터링 및 통계관리 강화, 빈곤층을 위한 예산 할당
  - ※ 빈곤현황: '02년 38.4백만명(18.2%), '03년 37.4백만명(17.4%), '04년 36.1백만명(16.6%)
  - World Bank의 Poverty Line : 1달러/1일 7.4%, 2달러/1일 53.4%

#### (2) 토의요지

- 국가빈곤감축전략(PRSP)는 모든 이해당사자간의 이해가 필요
- PRSP의 목표와 프로그램은 연간 정부 계획, 예산에 통합되어야하며, 빈곤감축은 MDGs와 연결

하여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 빈곤감축 문제는 교육, 보건 등과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지방빈곤감축을 위해서는 농업과 농촌개발 및 효과적인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

## 다. 안보와 개발(Security and Development)

### (1) 인니 정부

- 경제성장 촉진을 위하여 안정적인 안보상황 구축 필요
- 15년내 중산층 규모 및 1인당 GDP 4배 성장 목표 설정
- 민간수송, 보건 및 지방당국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항만 및 항공운송 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찰 및 국방부 기능 향상

## 라. 보건 및 교육(Health and Education)

### (1) 교육

- 인니 정부
  - 빈곤층 및 혜택을 받지 못한 자녀들에게 교육 기회 확대
  - 교육의 질 향상 및 평등한 교육 기회 부여
  - 교육관리에 있어서 효율성과 효과성 향상
  - 아체지역의 교육은 긴급지원, 복구지원, 재건지원 3단계로 구분하여 지원
- 토의 요지
  - 아체지역 교육분야 지원을 위한 time schedule 및 원조공여국간 조정을 위하여 인니 경제개발 계획청(Bappenas)의 역할 수행 필요
  - 아체지역에도 인니정부의 교육정책이 동등한 적용이 필요하나, 교육의 지방분권화는 아체지역의 지진해일 피해로 인해 특수상황이 발생되어 추후 적용되어야 함을 제기

### (2) 보건

- 인니정부
  - 주요보건정책 : 질 좋은 보건서비스 접근 기회 확대, 건강증진과 환자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로 질병 예방, 빈곤층 가족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빈곤층에 특별 서비스 제공
  - 중기개발계획 목표 : 유아사망율(현재 35% → 2009년 26%), 모자사망률(307→226), 영양부족어린이(25.8% → 20%), 평균수명(6세 → 70.6세)
  - 주요이슈 : 아체지역의 쓰나미 피해로 인한 대응, 어린이 보건서비스, 보건분야 지방분권화, 전염병 통제 및 관리



## 마. 원조효율성 (Aid Effectiveness)

### (1) 인니 정부

- 원조의 효율성을 위해 투명한 정책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
- 인니정부는 중기개발계획(2004-2009)에서, 효과적인 원조를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 직업 창출, 민간부문투자 증진을 통한 경제성장, 빈곤감축, 인적자원개발 추진
- 인니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정책 대화 강화 필요
  - national ownership 에 근거한 수요, 자체 정책과 전략 반영 필요
  - 공여국간 조화 및 원조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함을 강조

### (2) 토의 요지

- 인니측에 실행 결과, 투명성, 책임성 및 비용효율성에 대한 관심을 요구
- 원조효율성의 증진을 위해 부패척결위원회(Corruption Eradication Commission) 설립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원
-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인니 정부간의 중점 협의 필요사항
  - 프로젝트 추진에 앞서 철저한 사전준비
  - 사업추진 정책의 공개적 토의
  - NGO 등의 참여 및 활용
  - 참여 국제기구, 정부 부처간의 협력 체계 강화
  - 사업수행 과정에서의 부패 척결
  -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지방 분권화
  - 조달체계 개선
  -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문제

## 바. 정부 개혁 (Government-Reform)

- 정부 개혁은 새정권의 우선순위 정책으로 5개년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초석
- 경제개발 증진 및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치, 법률 및 안보 분야에서 지속적인 개혁의 노력 전개
- 건전한 정치상황 조성, 법치질서 강화 및 법규 강화 개혁, 정부제도 강화, 부패·결탁·족벌 체제 타파를 위한 강력한 의지 천명 등

## 사. 산림 및 환경분야

### (1) 인니정부

- 2005-2009동안 산림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5대 선결프로그램을 발표
  - 불법벌채 및 거래 예방 및 근절
  - 산업으로서의 임업의 구조조정과 재도약
  - 산림자원의 보전과 복원
  - 산촌지역의 빈곤퇴치와 경제성장
  - 산지의 안정화와 산불예방
- 지난 2003년부터 추진중인 황폐지 복원조림 5개년계획(2007까지 300만ha)이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여국의 투자와 관심을 요청
- Aceh 지진 피해지역의 복구 Program의 하나로서 해안 침식방지와 해일피해 예방에 핵심적인 해안 생태계인 Mangrove 산림의 조림계획에 공여국의 참여와 지원을 요청함

### (2) 토의요지

- Togu Manurung 보고로 농대 임과대학장은 현재 인도네시아의 합판, 제재목, 가구, 목가공등 임업가공업계의 연간 생산능력으로 볼 때 매년 2,000만<sup>m</sup>³이상의 원목이 필요하나 산림부의 연간 벌목허가량은 530만<sup>m</sup>³이므로 임업가공업계의 구조조정이 전제되지 않는한 불법벌채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함
- 그 외 불법벌채에 관한 인니 정부의 빈약한 예산책정, Aceh 지역에서의 산림분야의 복원방안, 불법벌채 방지를 위한 산림부와 환경부의 협력방안 등이 논의되었음

## 7. 거시경제, 투자환경 및 금융분야 개혁

- 우리 대표(박강호 심의관)는 해외투자 유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아래사항을 강조
  - 경제 · 투자관련 법규의 철저한 이행 특히 법원 차원의 적극적인 이행이 필요
  - 조세 행정의 개선 특히 세금 산정 및 징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 이에 대해 인니 경제조정 장관은 상기 두 가지 문제가 현 정부의 중요 과제임을 공감하면서, 동 문제에 계속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다는 의사 표명

[자료 : 주인니 대사관]

## 2005년 필리핀 개발포럼/ 제26차 필리핀 원조공여국 회의

### I. 핵심내용

- 3.7-8간 Davao市에서 필리핀정부와 World Bank 공동주최로 필리핀 정부인사, 원조공여국 및 국제기구대표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제회의가 개최되어, 필리핀 경제상황, 개혁방안, 민다나오 평화 및 개발 등에 관한 정책방향 등을 토론하였음
- 필리핀정부는 작년 Arroyo 대통령의 재집권이래 추진해온 10대 공약(10- Point Agenda) 및 중기개발계획(Mid-Term Philippine Development Program)을 중심으로 각종 개혁조치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원조공여국/국제기구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으며, 원조공여국들은 개혁을 신속하고 철저히 추진함으로써 경제발전과 빈곤타파를 위한 선순환을 이끌어낼 것을 주문하였음.
- 유명환 주필리핀 대사는 우리의 對필리핀 ODA 현황과 다바오직업훈련원 개원식을 소개하고 필리핀 경제발전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우리정부의 지원의지를 표명하였음

### II. 회의개요

#### 1. 회의제목

- 2005 Philippines Development Forum : a Meeting of the Philippines Consultative Group & other Stakeholder

#### 2. 참석자(약 250명)

- 필리핀정부 : 대통령, 재무부, 경제개발청, 통상산업부, 에너지부, 교통통신부, 민다나오개발청, 농업부 등 경제부처 장관 전원 및 하원의원 수명
- 원조공여국/ 국제기구
  -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 독일 등 24개국
  - World Bank, IMF, ADB, EU, UN 등 22개 국제기구
- \* 우리 대표단은 유명환 대사, 배한진 서기관, 최성호 KOICA 소장이 참석

### Ⅲ. 주요논의내용

#### 1. 회의 전반

- 금번회의에서 필리핀측은 Arroyo 대통령을 비롯한 경제각료 전원이 참석하여 10대 공약 및 중기발전계획에 따른 필리핀 정부의 개혁 노력을 소개하고 문제점과 개선책에 관한 원조공여국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음
  - ① VAT 인상, Sin Tax 등의 증세조치, 전력공사 등 적자국영기업매각 등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개혁조치, ② 투자 유치노력, ③ 부패, 무능 해소를 통한 Good Governance 육성, ④ 교육, 보건강화, ⑤ 지방별 균형발전 방안 등을 소개
- 원조공여국 대표들은 필리핀 정부의 개혁조치와 관련, 작년도 경제실적 호조(6.1% 성장) 및 세계 경제호조와는 달리 기회의 창이 줄어들고 있으므로(Narrowing the Windows of Opportunity) 失機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혁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히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함.
  - 아울러 각종 개혁조치에 대한 경과 및 미비사항을 세세히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계획을 주문함
- 필리핀의 정치, 경제, 사회 발전은 빈곤층과 소외지역의 통합, 재정적자해소, 부패무능타파, 인구 문제 해결 등의 종합적이고 동시다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임이 재차 확인됨
  - 아울러 필리핀 전체의 정치·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낙후지역인 민다나오의 평화 정착과 경제개발을 통해 동지역의 치안불안을 해소하고 주류사회에 편입시키는 노력이 필수적임

#### 2. 주요인사 언급요지

##### 가. Arroyo 대통령 (폐막연설)

- 작년도 대통령선거이래 강력한 개혁조치를 추진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는 바, 정치적 안정, 민다나오의 평화질서 회복, 투자유치에 유리한 대법원 판결, 재정개혁에 대한 의회의 협조 등이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음
- 재정개혁조치로 조세행정개혁, 국영기업 사유화, 예산적자 해소 및 빈곤타파조치 등을 추진하고 있는 바, 돈세탁 방지 비협조국 명단 제외, 일부 신용평가기관의 등급 상향 조정, 폐소화 강세 등의 좋은 징조가 나오고 있음
- 경제개발을 위해 콜센타, 하이테크분야, 자동차산업에 대한 해외투자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농업, 주택, 광업 등의 육성 및 클라크-수빅 개발 등을 통해 천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

고자 노력하고 있음

- 대외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영토보전과 해외파견근로자 보호라는 대전제하에 기존 우방국인 미국 및 아세안제국 등과의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고 이슬람권, EU 등과의 파트너십을 육성해 나갈것임

#### 나. Von Amsberg 세계은행 지역대표

-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 조짐 및 국제이자율 인상 등을 감안할 때, 경제개발을 위한 기회의 창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므로 경제개혁조치의 시급함이 강조되고 있음
- 최근 전력요금 인상, 주류, 담배세 부과, 재정건전성 확보 프로그램 도입, 에너지분야 개혁조치 등의 필리핀 정부의 개혁의지를 평가하나, 막대한 부채누적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경제발전의 최대의 걸림돌임을 감안할 때, 재정개혁의 강력한 추진이 필요함
- 재정개혁 조치로서 세원 발굴뿐만 아니라 조세행정 개선 및 정부지출시 지출책임제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부가가치세(VAT) 인상은 여러단계의 복잡한 세제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단순한 세제를 설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국제사회는 필리핀의 개혁의지와 실천노력을 주시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경우 보다 많은 원조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음

### 3. 전체회의 및 분야별회의

※ 금번 회의는 전체회의 시간을 줄이고 5개 분야별로 Working Group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개사안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을 유도하였으며, 필리핀정부 및 공여국/ 국제기구 외에 NGO 및 경제계 인사 등 이해관계자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회의 형식을 변경함

#### 가. 전체회의

- 전체회의에서는 필리핀 경제현황 및 개혁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① 재정개혁 및 금융제도 정비, ② 중기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 아울러 민다나오 평화회담 및 개발계획에 관한 브리핑이 있었음

## 나. 그룹별회의

- 그룹별회의는 Social Progress, Growth and Investment Climate, Economic and Fiscal Reforms, Governance, Decentralization and Local Government 등 5개 그룹으로 나뉘어 각분야별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였음

## IV. 참가 성과

- 금번 회의에서는 주재국의 경제현황, 중장기 발전계획, 국제사회의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토의가 이루어진 바, 이를 통해 우리의 원조방향을 점검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됨
  - 향후 對필리핀 원조는 필리핀이 당면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재국이 중장기적으로 설정한 개발 계획 및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효과적인 시행가능여부 등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원조예상성과분석, 프로젝트 추진방안 및 일정에 대한 점검, 사후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다른 공여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정보 및 의견교환 등의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임
  - 아울러 World Bank 주도의 민다나오 다자신탁기금에도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주필리핀 대사관]